



윤석열정부 1년 평가 핸드북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인사말	4
발간사	6

제1부 | 한눈에 보는 윤석열정부 실패 1년

경제

무너진 경제, 캄캄한 미래 10

- 윤석열정부 경제 F학점 10
- 1%대 경제성장률 11
- 역대 최대 수출적자 -633억달러 12
- 대중국 무역적자 -40억 달러, 반도체 수출 최대 적자 -41.5% 13
- 24년 만에 물가상승률 6.3% 최대치, 공공요금 30% 이상 인상 14
- 김진태發 레고랜드 사태, 50조로도 해결 못한 최악의 금융사고 15
-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부자감세, 2024년 국세수입 감소 전망 -17조 16
- 재생에너지 목표 감소 -8.6%p, 핵심산업 수출 감소 전망 17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18

- 'Kwarosa' 과로사 국가 18
- 청년 일자리 무너지는데, 정부는 무대책 19
- 붕괴된 공교육 사교육비 26조원, 역대 정부 최고액 돌파 20
- 학교폭력 폭증, 정순신 따라하는 학폭불복 행정소송도 폭증 21
- 약자복지? 저소득층 적자가구 지속 증가 22
- 공공의료·보장성 나몰라라, 의료산업에만 관심있는 윤석열정부 23
- 탄소중립 의지 없는 윤석열정부 24

정치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25

- “검사독재”,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정부 25
- 정당민주주의 파괴, ‘윤심(尹心)’의힘’에 짓눌린 국민의힘 26
- 10.29 이태원참사, 무너진 국민안전, 무책임 정부 27
- 언론 입 막는 고소·고발 남발 정부 28
- 의회주의 파괴, 시행령 통치, 거부권 남발 29
- 야당유죄, 여당무죄, 검찰의 이중잣대 30
- 협치포기,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31
- ‘국민통합’ 아닌, ‘국민 갈라치기’ 정부 32

외교 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33

- 외교안보 리스크 1호 윤석열대통령, 철학 없는 아마추어 지도자의 국격 훼손 33
- 진영편중 외교안보노선, 강대국 패권경쟁에서 한국만 푸대접 34
- 대일 굴욕외교, 매국외교, 빈손외교, 최악의 외교참사, 대한민국 포기 외교 35
- 친일 군사행보, 한미일 군사동맹 의지 표출 36
- 사라진 평화, 출구 없는 한반도 안보불안 37
- 국민불안 키운 안보참사 시리즈, 안보 무능력·무책임 정부 38
- 말로만 북핵대응, 실제 국방력에는 무관심 39
- MB 답습 無대책, 담대하지 않은 「담대한 구상」, 無원칙 위험한 발상, 無해법 공허한 허상 40

제2부 | 국정 리스크 1호 윤석열대통령 10대 망언

1. 대통령의 욕설 44
2. 유치한 피장파장 45
3. 나르시시즘의 극치 46
4. 배려, 존중, 공감 상실 47
5. 일본 극우 수준의 역사관 48
6. 서툴고 위험한 외교 망언 49
7. 서슴지 않는 적대와 혐오 50
8. 모국어를 부끄러워하는 대통령 51
9. 다시 색깔론 52
10. 국민이 이해해줘야 하는 대통령 53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입니다.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경쟁,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은 세계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전대미문의 과제들입니다. 유능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때 대전환의 위기는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은 그 만큼 중요합니다. 정부 출범 1주년은 그래서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나 정부출범 1주년을 축하하기에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정부가 거둔 성과는 너무도 절망적입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지난 1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후퇴’가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회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안전도 무너졌습니다. 이태원참사로 159분의 희생자가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도, 재난대응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재난관리 실패였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일본 굴욕외교, 미국 의존외교, 중국 러시아 적대외교에 국익과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경험한 1년간의 ‘거대한 후퇴’를 이 작은 핸드북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겪고 있는 삶의 불안과 고통까지 생생하게 담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습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풀어야 할 과제들을 더 치열하게 모색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거대한 후퇴를 막고, 입법과 정책으로 민생을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챙기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와 핸드북 발간에 수고해 주신 민주연구원 정태호 원장님과 관계자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광 온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입니다.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윤석열정부 1년 평가 핸드북>은 대한민국이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핸드북에는 윤석열정부의 독선, 독단, 독주로 인한 대한민국 모든 분야의 퇴행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성취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의 불안과 고통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막중한 책임을 되새깁니다.

윤석열정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SPC 계열 제빵공장의 20대, 전세 사기를 당한 청년들, 갑질과 간접고용에 시달린 경비원, 폐암에 노출된 급식노동자, 이태원에 가서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 응급실을 찾다가 길에서 사망한 환자 등, 이 모든 아픔은 사회적 죽음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역할을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 고용 장려금도 줄였습니다. 교육과 복지 투자를 줄였습니다.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정책을 정부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임기가 4년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주당다운 가치와 담대한 정치로 윤석열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아프게 견제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국정운영 기조가 사람 중심 기조로 대전환되도록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AI경제와 미래 일자리, 기후위기, 주거복지, 육아, 교육, 젠더 등 모든 정책의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겠습니다

<핸드북> 발간에 수고해주신 민주연구원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핸드북은 지난 1년의 반성문입니다. 다음 기회에는 지난 1년의 실정과 퇴행에 대한 비판을 넘어 민주당의 대안과 비전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간사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정 태 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정태호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은 윤석열정부의 시작이자 남은 4년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정부 1년 동안 우리 국민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민생 파탄, 복지 후퇴, 국가시스템 부재, 권력 사유화, 공정 파괴, 안보 불안, 굴욕 외교, 뜬금없는 정책으로 우리 국민은 1년 내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올바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의 총체적 무능과 국정 파탄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 초부터 5주간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의 경제·사회·정치·외교안보를 총망라한 실정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정책브리핑 특집호 ‘한눈에 보는 윤석열정부 1년’ 시리즈를 매주 발간해 왔습니다.

〈윤석열정부 1년 평가 핸드북 -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결과물을 종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일종의 국민 맞춤형 소책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한눈에 파악하고 제대로 평가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해 주신 연구원 관계자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정 태 호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제 1 부

한눈에 보는
윤석열정부 실패 1년

경제

무너진 경제, 캄캄한 미래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정치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외교
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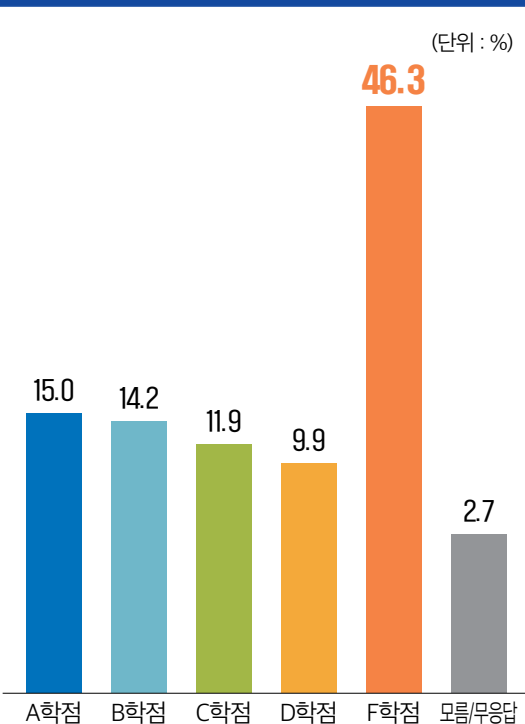
경제

무너진 경제, 캄캄한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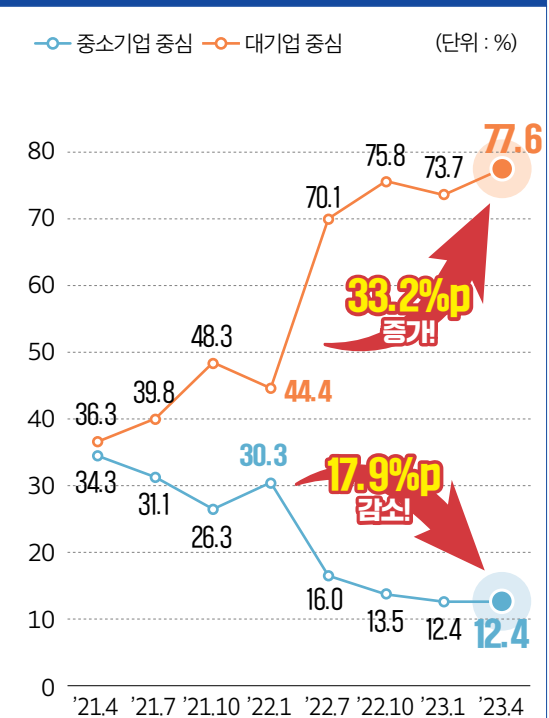
윤석열정부 경제 F학점

- 국민 46.3%,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낙제점** 부여
- 대기업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
 - 대기업 중심 기업정책 : 33.2%p 증가 평가
※ 문재인정부 44.4% → 윤석열정부 77.6%
 - 중소기업 중심 기업정책 : 17.9%p 감소 평가
※ 문재인정부 30.3% → 윤석열정부 12.4%

윤석열정부 경제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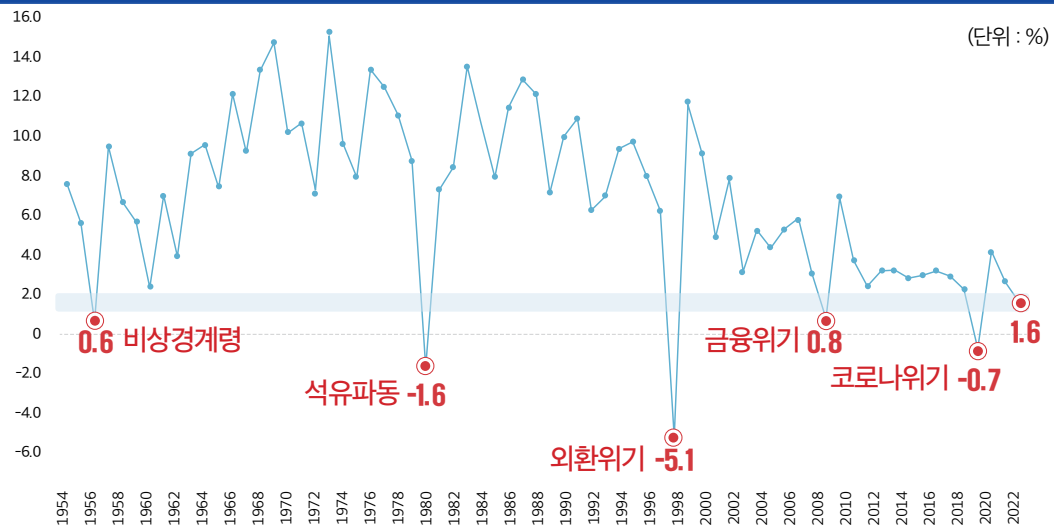
윤석열정부 기업정책 평가



1%대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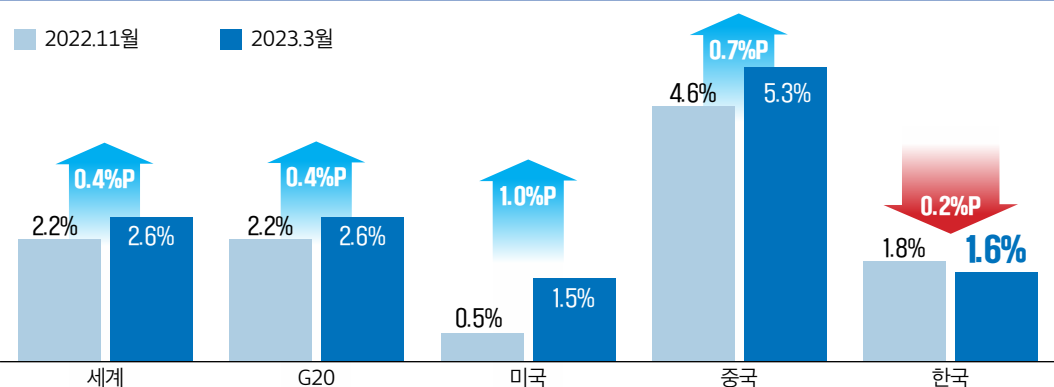
- 1%대 성장률은 1954년 통계발표 이후 **역대 6번째**
- 문재인정부 시기 2021년 4.1% 성장,
윤석열정부 들어 2023년 1.2~1.8% 전망
- 글로벌 성장률 회복 추세, 한국 하락세
※ 한국, 동아시아 국가들 중 경제성장률 꼴지 수준 전망 (ADB)

역대 최저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 OECD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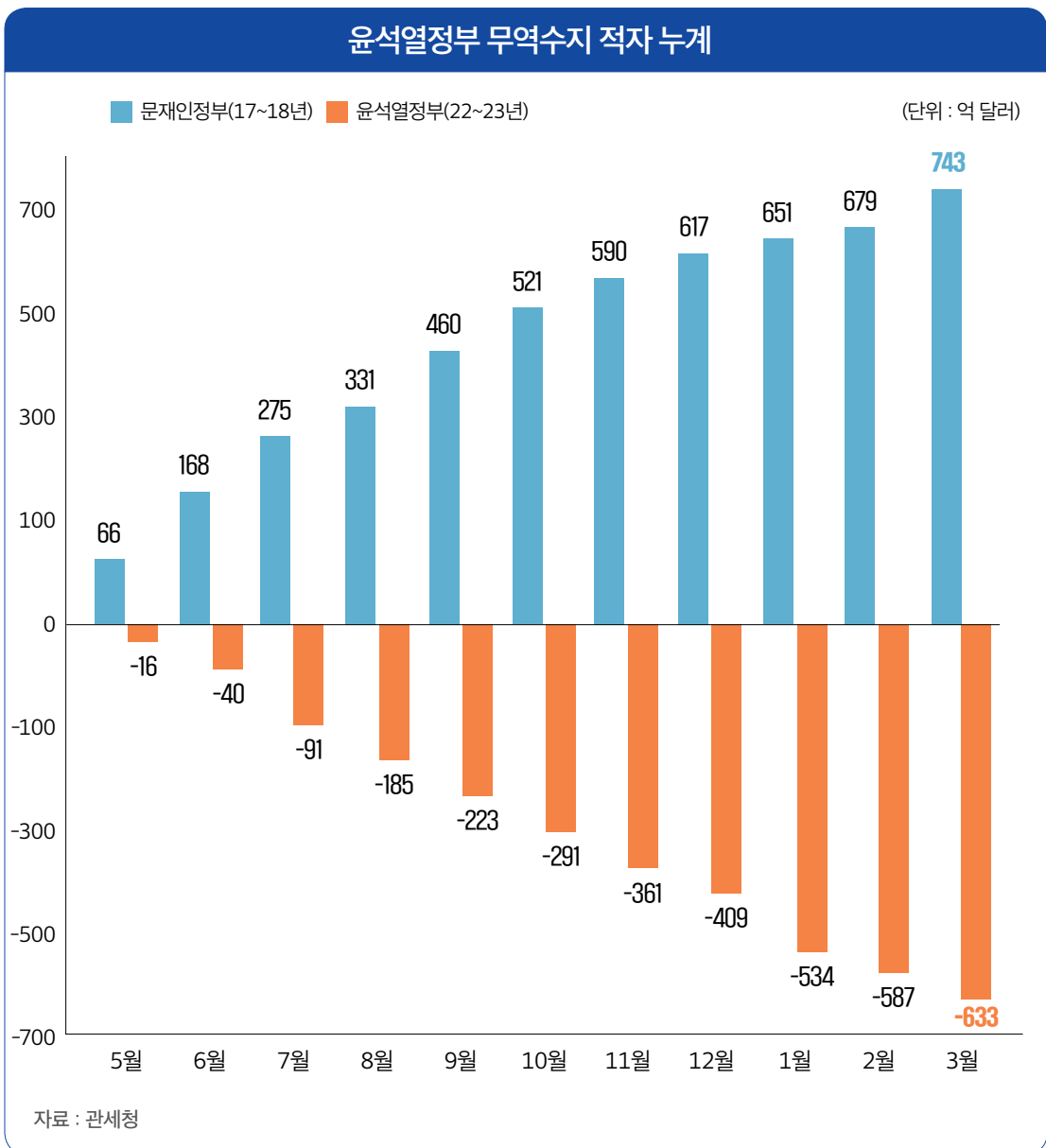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비교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23.3월

역대 최대 수출적자 -633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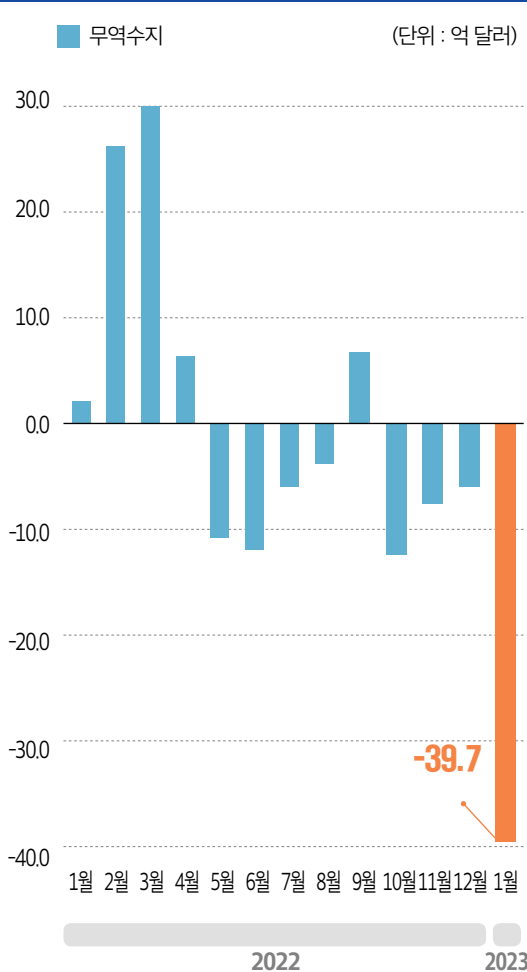
- 문재인정부 초기 무역수지 흑자 743억달러,
윤석열정부 초기 무역수지 **적자 -633억달러**
- 2023년 들어 11년 만에 **2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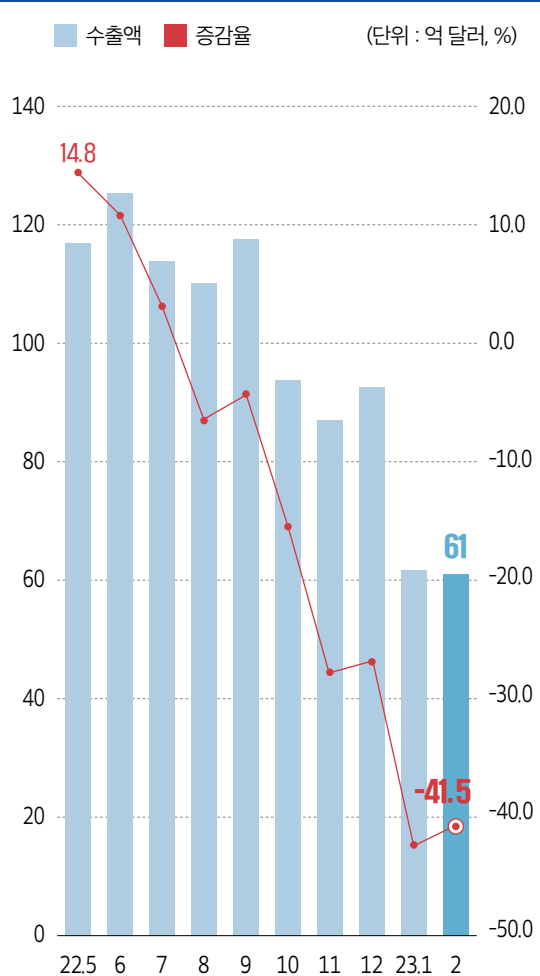
대중국 무역적자 -40억 달러 반도체 수출 최대 적자 -41.5%

- 중국, 윤석열정부 들어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
- 최상목 경제수석의 ‘脫중국 선언’ 쇼크 우려
-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 부실대응

윤석열정부 대중국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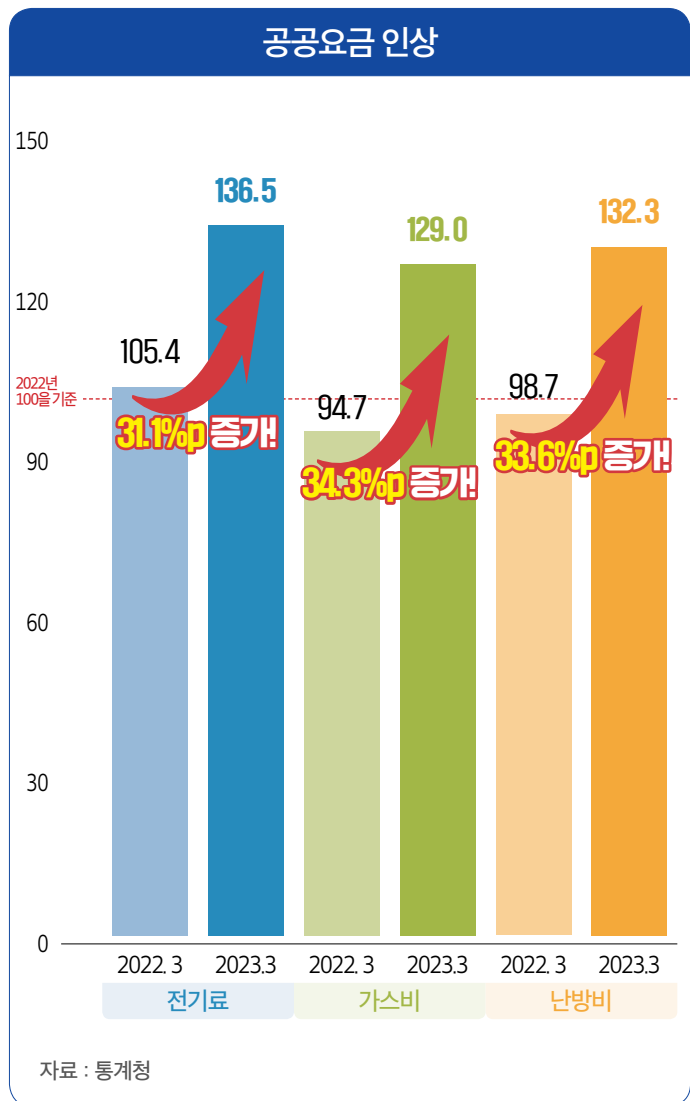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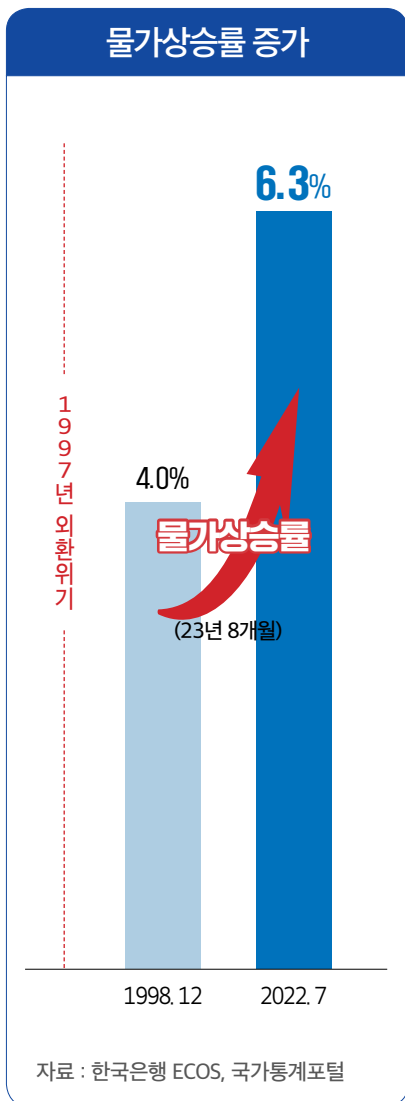


반도체 월별 수출액 추이



24년 만에 물가상승률 6.3% 최대치 공공요금 30% 이상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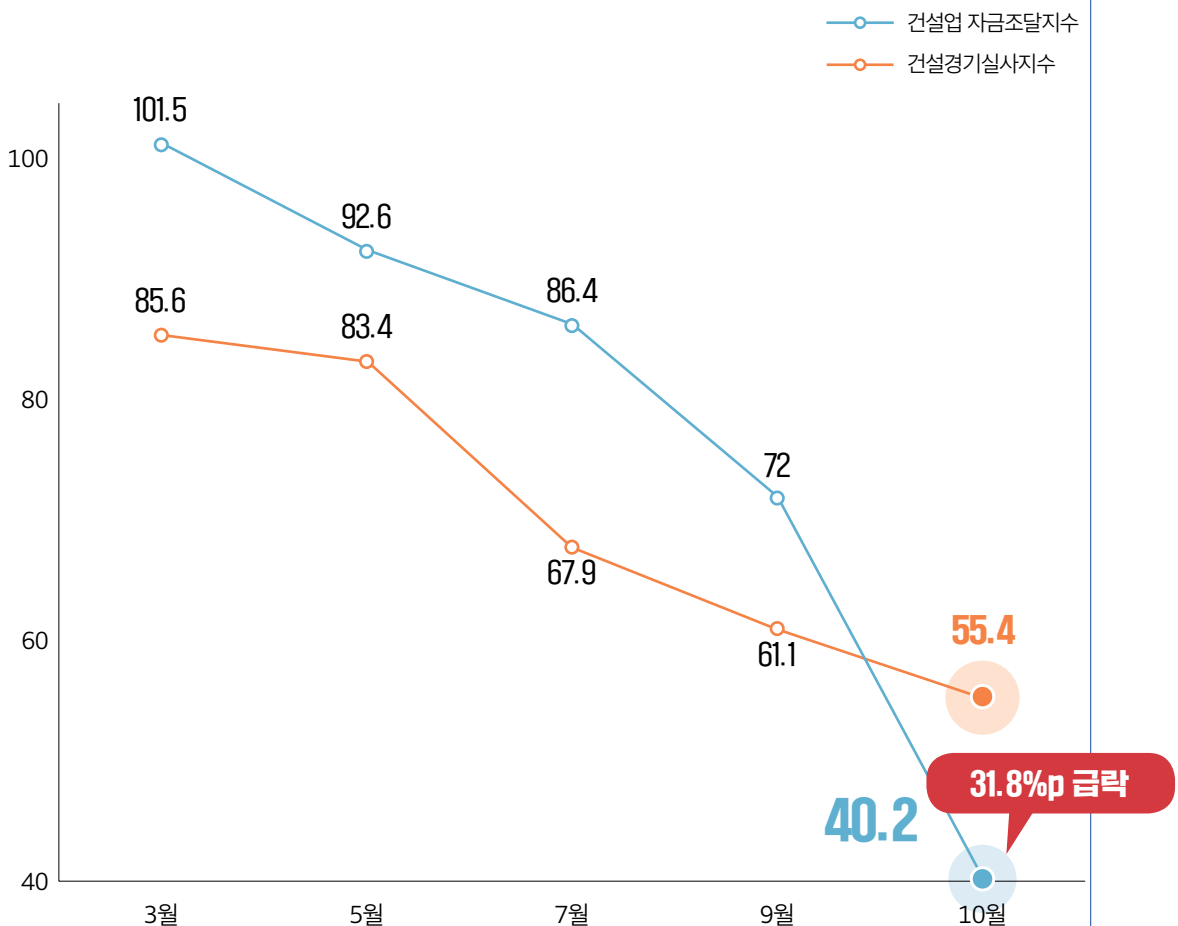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22.7월 **물가상승률 최고기록!**
- 윤석열정부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폭!**
 - ① 전기료 폭탄 : 2023.3월 전년대비 31.1%p 상승
 - ② 가스비 폭탄 : 2023.3월 전년대비 34.3%p 상승
 - ③ 난방비 폭탄 : 2023.3월 전년대비 33.6%p 상승



김진태發 레고랜드 사태 50조로도 해결 못한 최악의 금융사고

- 2022.9월 김진태 레고랜드 채무 2천억 불이행 선언 쇼크
- 2022.10월 건설사 자금조달지수 31.8%p 급락, **건설사 줄도산** 위기 직면
- 정부 50조 긴급 투입했으나, 금융시장 여전히 불안

건설업 자금조달지수 및 건설경기실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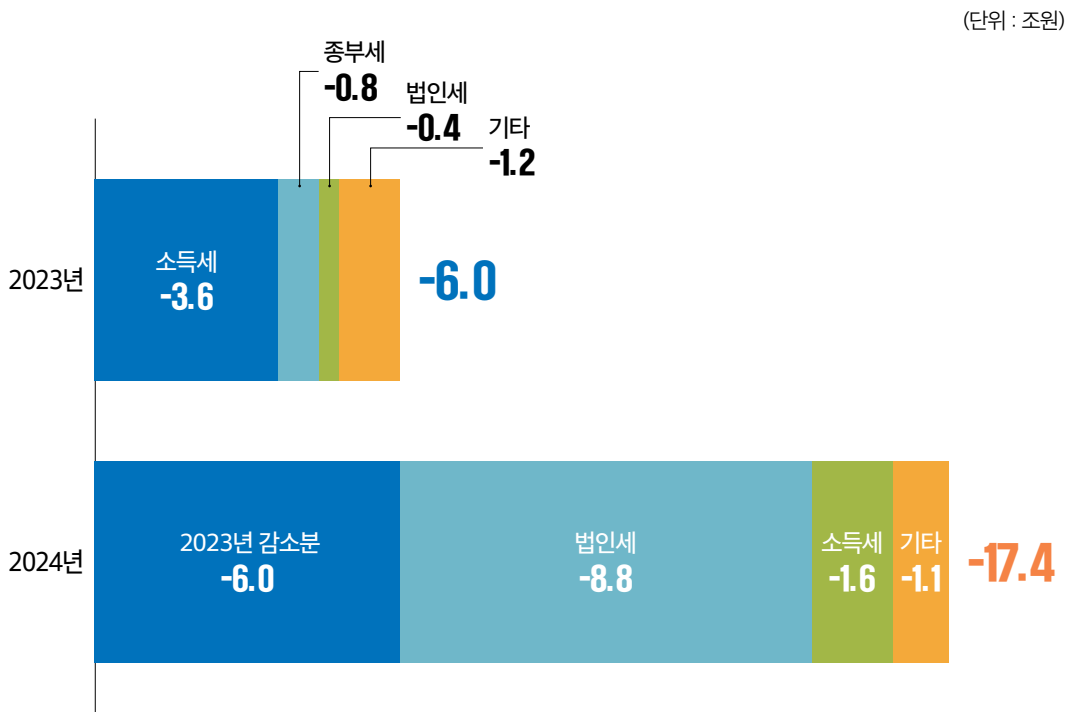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블룸버그

최악의 경제상황에도 부자감세 2024년 국세수입 감소 전망 -17조

- 윤석열정부 트리플 부자감세 추진
 - ① 종부세 납부 고액부동산 보유자 : 비과세 또는 세부담 감소
 - ② 순이익 3천억 이상 100여개 법인 : 세율 인하
 - ③ 종목당 주식 99억 보유 투자자 : 비과세 전환 추진
- 미국, 부자증세로 7400억 달러 확보
영국, 부자감세 후폭풍으로 44일 만에 총리 사임
- 국세수입 2023년 -6조, **2024년 -17조 감소** 추정

윤석열정부 감세정책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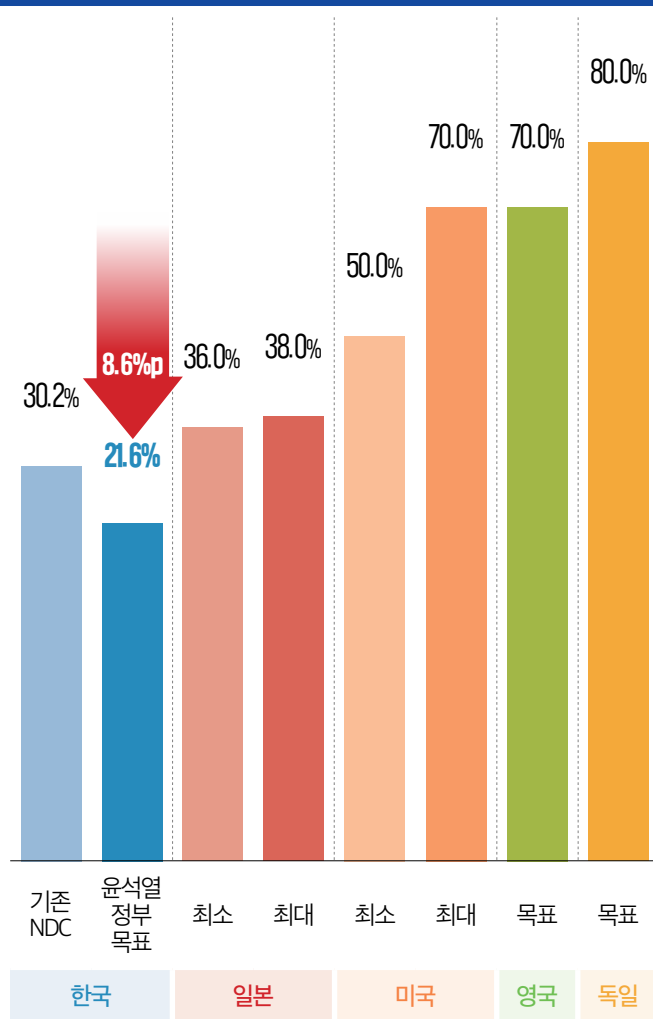
주 : 반도체, 수소·전기차 등의 설비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23년 3월 추가인상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23.1., 2023.3.)

재생에너지 목표 감소 -8.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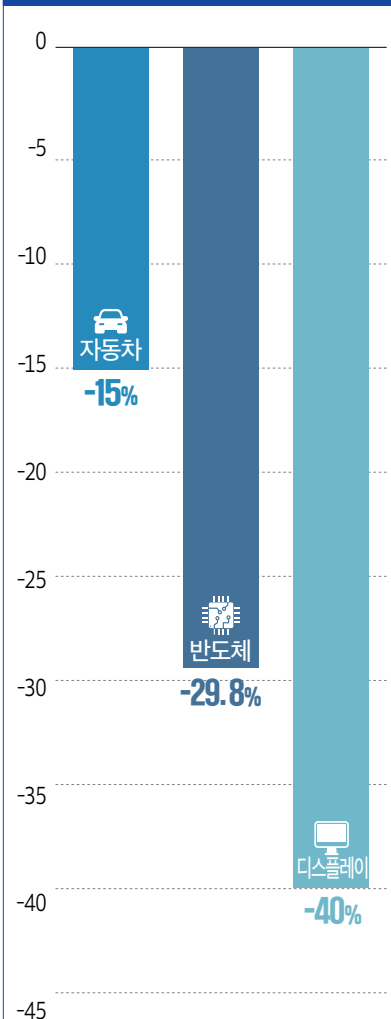
핵심산업 수출 감소 전망

- 윤석열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2% → 21.6%**
-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수출 감소

윤석열정부 및 주요국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교



RE100에 미참여시 수출 영향



사회

무너진 복지, 거꾸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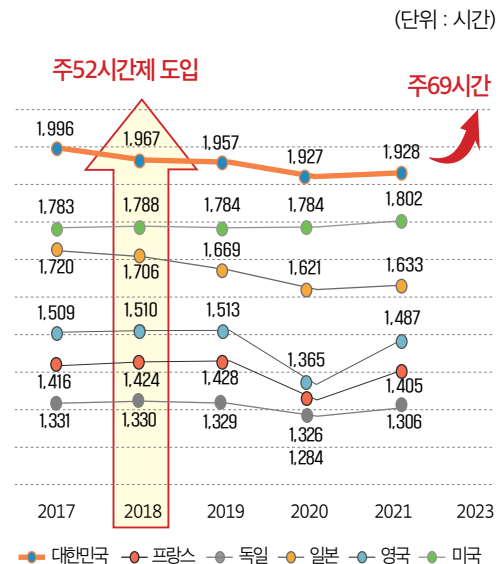
'Kwarosa' 과로사 국가

- 2천만 근로자의 삶 대통령 지지율에 좌지우지, 무원칙·무책임·무관심 정부
 - 윤석열대통령, “최대 주69시간 근로 가능”에서 지지율 17%로 떨어지자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 변경 (18~29세 지지율 / 한국갤럽, 2023.3.17)
-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시간은 **‘주36.7시간’**, 거꾸로 가는 정부의 근로시간 정책
 - 법정 최대 근로시간: '53년 주60시간 → '89년 주64시간 → '03년 주68시간
→ '18년 주52시간 → **'23년 주69시간**
- 주60시간 이상 근무시 뇌심혈관질병의 업무 관련성 승인율 91.7%
 - '22년 뇌심혈관질병의 업무 관련성 승인율(신청건수): 주52시간 미만 15.8% (1,302건), 주52이상~60시간 미만 76.6%(256건), 주60시간 이상 91.7%(254건)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 변화

1953년 「근로기준법」	법정 근로시간 주48시간 최대 주 60시간
1989년 개정 「근로기준법」	법정 근로시간 주44시간 최대 주 64시간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 (주5일 근무제)	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 최대 주 68시간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주52시간 근무제)	법정 근로시간 주40시간 최대 주 52시간

임금근로자의 실근로시간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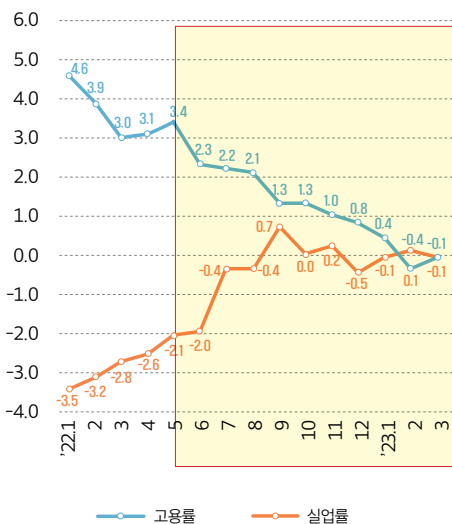


청년 일자리 무너지는데, 정부는 무대책

- 고용 한파 속 청년 고용 하락 추세, **고용률 하락**, 실업률 감소폭 축소
 - 고용률 증감: ('22.3.)▲3.0%p (46.3%) → ('23.3.)▼0.1%p (46.2%)
 - 실업률 증감: ('22.3.)▼2.8%p (7.2%) → ('23.3.)▼0.1%p (7.1%)
- 상용직근로자증가폭은 줄고임사일용직근로자만증가, **악화되는청년고용의질**
 - 상용직 근로자 비중 증감: ('22.3.)▲1.0%p (63.5%) → ('23.3.)▲0.3%p (63.8%)
 - 임시직 근로자 비중 증감: ('22.3.)▼0.9%p (26.4%) → ('23.3.)▲0.9%p (27.3%)
 - 일용직 근로자 비중 증감: ('22.3.)▼0.7%p (3.2%) → ('23.3.)▲0.3%p (3.5%)
- 거꾸로 가는 청년 고용 정책
 - 양질의 청년 일자리, **공공기관 채용 축소**: ('22) 2만5542명 → ('23) 2만2000명, 최근 6년 만에 최소
 -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대폭 삭감** ('22) 13,099억원 → ('23) 6,40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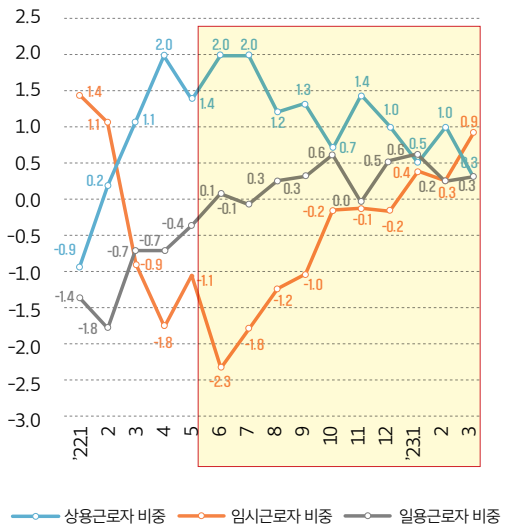
청년(15~29세) 고용의 양 추세

(전년동월대비, 단위: %p)



청년(15~29세) 고용의 질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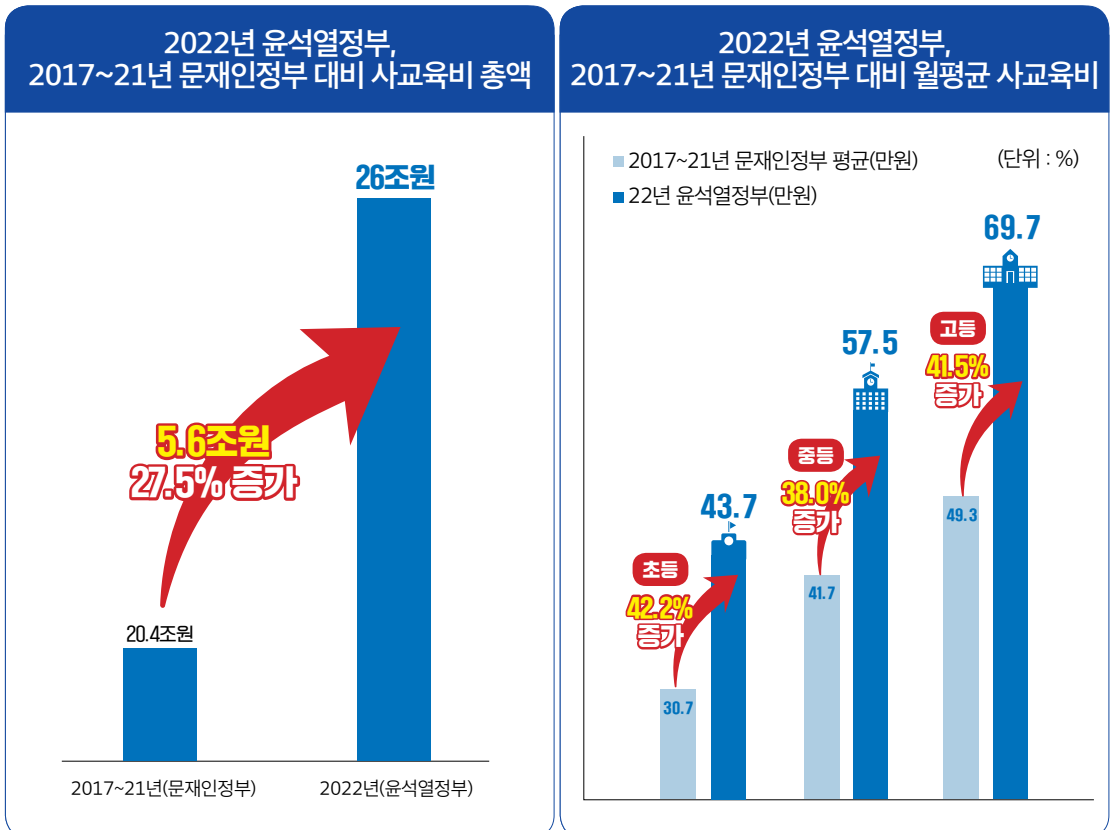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단위: %p)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붕괴된 공교육 사교육비 26조원, 역대 정부 최고액 돌파

- 윤석열정부 1년차 사교육비 총액 26조,
모든 학년에서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참여시간 일제히 증가
 - 문재인정부 5년 평균 사교육비 총액은 20.4조원으로
윤석열정부 들어 무려 **27.5% (▲5.6조원)폭증**
 - 사교육비 총액 전년대비 ▲2.6조원(10.8%) 증가로 사교육 대폭발 발생
 -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43.7만원, 중학생 57.5만원, 고등학생 69.7만원으로 문재인정부 5년 대비 초 42.2%(▲13만원), 중 38.0%(▲15.8만원), 고 41.5%(▲20.4만원) 폭증하여 **역대 정부 사상 최고**
 - “교육도 경쟁시장 구도가 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사교육시장 부흥을 펼쳐온 윤석열정부의 정책 무능으로 학부모들은 허리가 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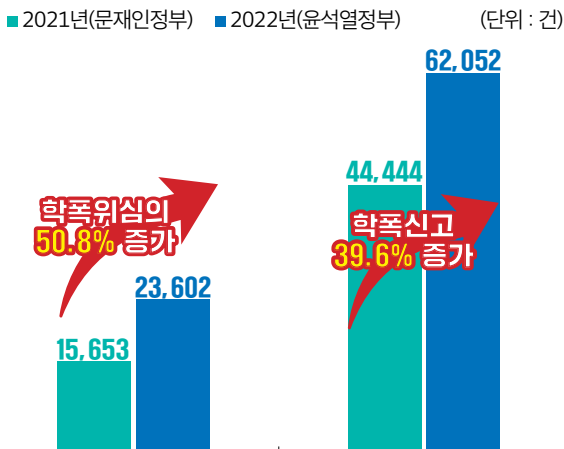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2023.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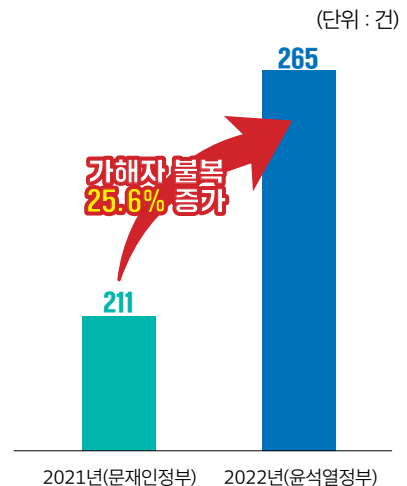
학교폭력 폭증, 정순신 따라하는 학폭불복 행정소송도 폭증

- 2021년 대비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학폭 신고 건수 39.6%, 학폭위 심위 건수 50.8% 폭증
 - 학폭 사건 급증으로 4주 이내 심의지침 미준수가 30%, 서울은 **70.9%의 사건이 심의지연**으로 피해학생과 가족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음
 - 윤석열정부는 학교전담경찰관 5천명 총원 및 학교 2곳당 1명씩 배치 공약, 그러나 임기 시작 후 오히려 100여명 감소
 - 2023년 경찰청 운영계획에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증원 예산 누락**
 - 교육지원청 학폭 심의업무는 **전문성 및 인력부족 상태**로 총체적 난국
- 정순신 사건같은 학폭 행정소송도 폭발적으로 증가
 - 가해자의 법적대응은 유전무죄, 법률가들의 틈새시장으로 변모, 윤석열정부가 학폭 법률시장을 육성하고 있는 꼴
 - 학폭 가해자 불복조치로 제기된 행정소송 건수는 2022년 265건, 전년도 대비 **25.6% 폭증**

학폭신고 및 학폭위심의 건수 비교



학폭 가해자 불복 행정소송 건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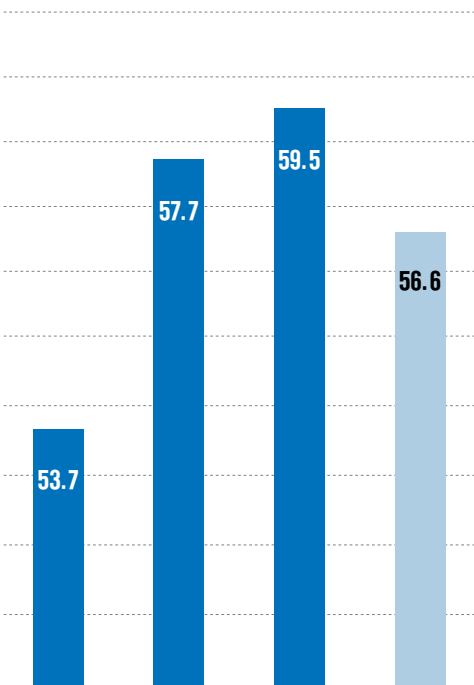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학교폭력 대책 발표자료, 2023.4월

약자복지? 저소득층 적자가구 지속 증가

- 윤석열 집권 이후 하위 1분위(20%) 적자가구 비율 증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022년 2분기 53.7% → 2022년 4분기 **59.5%** (2019~2021년 평균 56.6%)
- 공적이전소득은 오히려 감소
 - 2022년 2분기 512천원 → 2022년 4분기 **463천원**
- 고물가로 증가한 소비지출을 가처분소득이 따라가지 못해 저소득층 생활고 가중
 - 2022년 2분기 평균소비성향 130% → 2022년 4분기 137%

하위 1분위(20%) 적자가구*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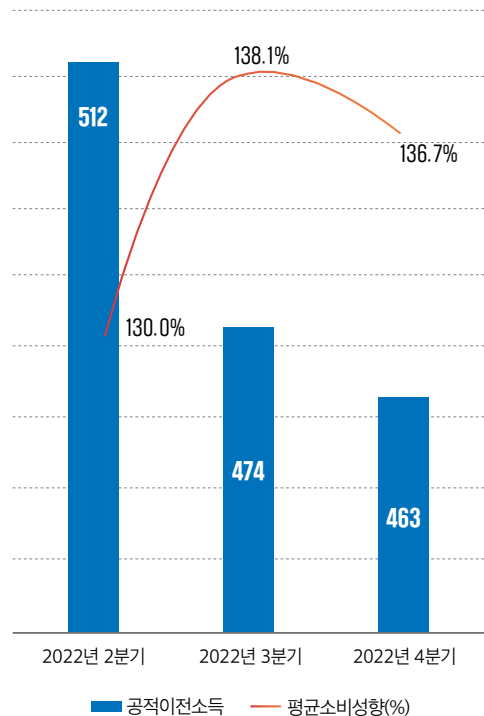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문재인정부 평균

*처분가능소득 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

하위 1분위 공적이전소득* 및
평균소비성향** 추이

(단위 : 천원, %)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 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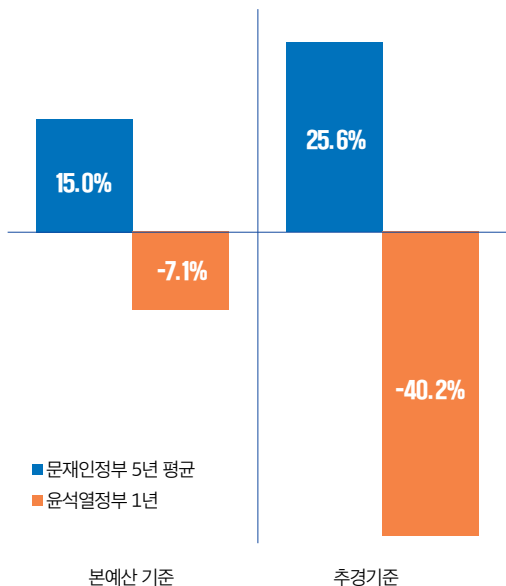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 통계청 2022년 가계동향조사

공공의료·보장성 나몰라라, 의료산업에만 관심있는 윤석열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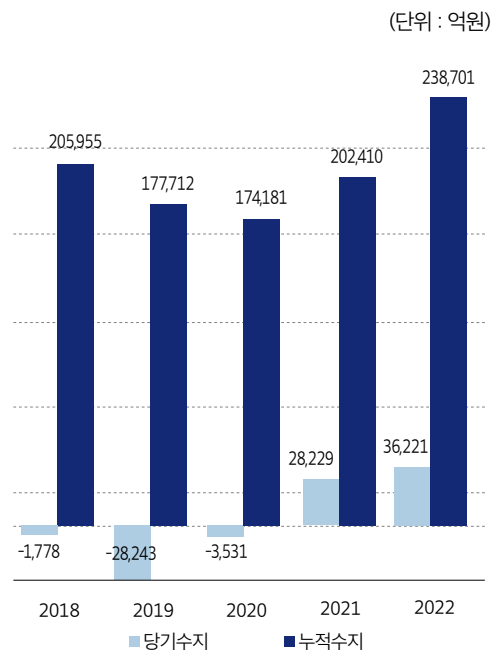
- 2023년 보건의료예산 전년대비 7.1%(3,485억원) 삭감
(추경대비 **13.2% 삭감**, 3조593억원)
 - 공공병상 비율 인구 1천명당 12개. OECD 28개 국가중 멕시코에 이어 최하위(2021)
 -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인력 양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삭감
정보화,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개발 등은 순증
 - 감염병 대응체계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 **예산 49.7% 삭감**
- **가짜건강보험 재정안정론**
 - 문재인케어 폐기 이유를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근거로 들었으나
2022년 단기수지 3조6,291억원 흑자
 - 누적적립금은 2022년 23조8,701억원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2018년보다 3조2,746억원 순증

보건의료 예산 증가율 비교



자료 :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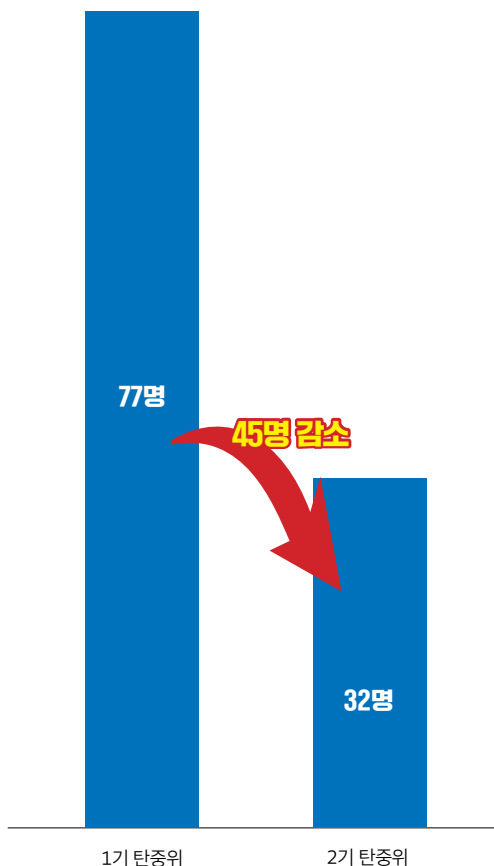


자료 : e-나라지표, 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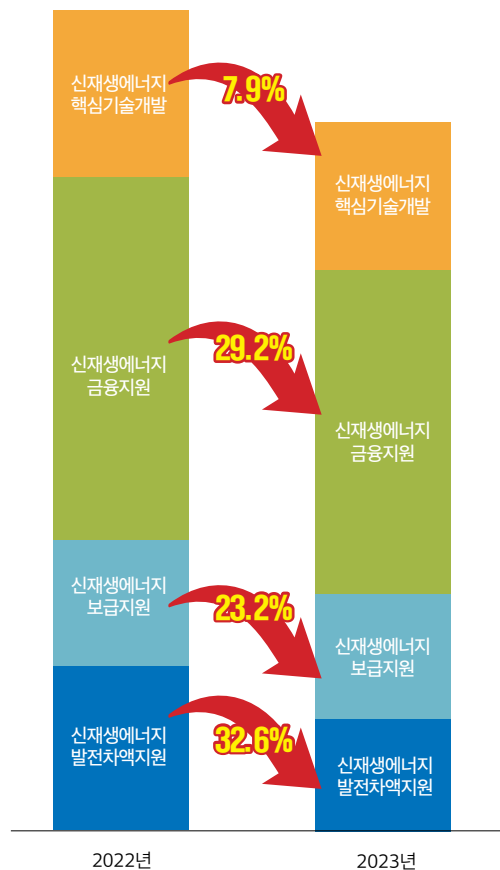
탄소중립 의지 없는 윤석열정부

- 2기 탄소중립위원회, 위상과 역할 대폭 축소
 - 1기 탄중위 민간위원 77명 → 2기 탄중위 민간위원 **32명으로 축소**
-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사라지고 재생에너지 예산 대폭 축소
 -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예산안에 그린뉴딜 관련 언급과 내용 전무
 - 2023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 중 **재생에너지 관련 대부분 감액**
- 미래로 떠넘긴 탄소배출 감축계획
 - 윤석열정부에서는 **연평균 2%씩 감축**, 2027년 이후 **연간 9.3%씩 감축**

1, 2기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 수 비교



윤석열정부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비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정치

무너진 국가시스템, 불공정 정부

“검사독재”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정부

- 검사들, 국정시스템 장악
 - 전·현직 검사 133명, 정부요직 독차지
 - 대통령실 7명, 장·차관급 13명, 금융감독원장 전현직 검찰 출신
 - 정부인사검증시스템, 검찰 및 대통령실 검사들 장악
- 검찰권력 사유화, 법치주의 파괴
 - 대통령 중심 ‘검찰직할통치’ 체제 구축, 정적제거와 야당탄압에 올인
 - ※ 야당대표 및 前정부 수사에 윤석열사단 검사 150여명 동원
 - 대통령 본인, 가족, 검찰은 불가침 성역(聖域)
 - ※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윤우진 수사 무마,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등 수수방관
- 국민 대다수, 윤석열정부 = 검찰공화국 동의
 - 동의 61% (데이터리서치, 2022.6.29)

윤석열정부 검찰출신 주요인사

구분	현황
대통령실 비서관급 7명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검사), 윤재순 총무비서관(성비위 전력, 1997년부터 대통령과 인연 맺은 검찰수사관) 등
장관급 4명, 차관급 9명	박성근 총리비서실장(윤석열대통령 후배검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윤석열대통령 최측근 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윤석열대통령 라인검사),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윤석열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 근무) 등
정부파견 검사, 검찰공무원 113명	천재인 금감원 사모펀드 재조사TF 국장(윤석열대통령 라인 검찰특수부 검사), 우재훈 교육부 법무보좌관(창원지검 검사, 교육부직제에 없는 직위) 등

정당민주주의 파괴 '윤심(尹心)의힘'에 짓눌린 국민의힘

- **법치파괴** 당무개입
 - 헌법 위반 : 정당 자율성과 정당민주주의 파괴 (제8조)
 - 공직선거법 위반 :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한 당내 경선운동 불가” (제57조)
- **내로남불** 당무개입
 - 윤석열·한동훈(서울중앙지검장·3차장검사), 박근혜대통령 당무개입 기소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선고
- 국민 대다수, 윤석열대통령 당무개입 우려
 - 동의 65% (미디어토마토, 2023.2.3)

윤석열대통령 당무개입 정황

개입내용	주요 발언
이준석 당대표 촉출 개입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윤석열대통령-권성동대표직무대행텔레그램대화 22.07.26)
전대를 변경 개입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발언 4일 뒤 국힘 전대를 당원투표 100%, 결선투표제 도입 변경 (22.12.15)• 유승민 출마 포기
나경원 출마 저지 공세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자기정치에 실망했다” (대통령실, 2023.01.09.)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실, 2023.0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대표 출마 위해 나경원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저출산위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 해임 (2023.01.14.)• 당원 지지를 높던 나경원 출마포기
안철수 후보 공격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 보려는 사람은 국정운영의 방해꾼이자 적, 윤안연대 운운한 것은 극히 비상식적 행태” (윤석열대통령, 2023.02.05.) “안철수는 윤심(尹心) 아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2023.02.)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이진복 정무수석, 2023.02.)

10.29 이태원참사

무너진 국민안전, 무책임 정부

• 재난예방시스템 붕괴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상 대통령실이 재난예방·대응 콘트롤타워라는 사실 부정
※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콘트롤타워가 아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2022.11.8)

• 재난대응시스템 붕괴

- 대통령 지시사항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아닌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달
※ 대통령 지시 전파, 사고발생 접수(22:15) 후 2시간 넘게 소요

• 재난 책임 부재

- 공식적 사과도, 책임자 문책도, 책임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거부한 대통령
- 대형국가재난의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은 사상 초유의 정부

역대정부의 주요 사회적 재난에 대한 인사책임 조치 여부

정부(연도)	재난명	사상규모	조치 유무	인사책임 내용
김영삼 (1994)	성수대교 붕괴 사고	사망: 32명 부상: 17명	○	서울시장 경질
김영삼 (1995)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사망: 502 부상: 937 실종: 6	○	서울 서초구청장 파면
박근혜 (2014)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사망: 299 실종: 5	○	안전행정부 장관, 안행부 2차관 사임 감사원은 해양경찰청장 해임 요구
윤석열 (2022)	이태원 10.29 참사	사망: 156 중경상: 197	×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거부 법적조치 전무

언론 입 막는 고소·고발 남발 정부

- 취임 1년 만에 언론자유 후퇴
 - 회복된 언론자유지수 다시 무너질 조짐
(박근혜정부 70위 → 문재인정부 42위 → **윤석열정부 47위**)
 - ※ 美 국무부, MBC 관련 대통령실 언론대응을 폭력적으로 평가
 - ※ 국제기자연맹, “언론 명예훼손 고발은 협박의 전형적 예” 평가
- 윤석열대통령, 언론의 합리적 비판을 ‘가짜뉴스’라 싸잡아 공격
 -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판언론을 가짜뉴스 생산자라 맹비난
- 감사와 수사로 보복당한 언론
 - 감사원·국세청·검찰·경찰 총동원, 전방위적 압력 행사

윤석열정부 1년간 언론탄압 주요사례

사안	기관
김건희 여사 관저 사전 답사 기사 관련 ‘한겨레’ 명예훼손 고발	대통령실
대통령관저 이전 천공개입 보도 한국일보, 뉴스토마토 고발	대통령실
‘천공 관저이전 개입설’ 제기한 김종대·김어준 고발	대통령실
대통령 욕설 MBC 보도 경위 질의 공문서 발송	대통령실
동남아 순방에 MBC 취재 제한 통보	대통령실
MBC 세무조사 520억원 추징금 부과	국세청
‘바이든 쪽팔려서’ MBC 보도에 소송 제기	외교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MBC 방문진 감사 실시	감사원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의회주의 파괴

시행령 통치, 거부권 남발

- **폭주하는 시행령 통치**
 - 법무부 인사검증체계 개편, 경찰국 신설, 검찰수사권 확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금지 등
- **시행령마저 졸속**
 - 의견수렴 위한 40일 이상 **최소 입법예고 기간 무시**
 - ※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시행령 입법예고부터 공포까지 단 2주
 - ※ 경찰국 신설 시행령 단 4일, 검찰 수사권 확대 시행령 17일
- **거부권 행사 남발**
 - 이태원참사, 외교참사 **책임자 문책 전무**, 책임장관 해임건의안 연달아 거부
 - ※ 박정희 독재정권도 야당의 해임건의에 자진사퇴 방식으로 수용
 - 농민 생존권 걸린 양곡관리법, **정책 대안 없이 묻지마 거부권**

역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거부권 행사 여부

시기	해임건의 대상	거부권 행사 여부
이승만정부(1955)	임철호 농림부장관	자진 사퇴
박정희정부(1969)	권오병 문교부장관	자진 사퇴
박정희정부(1971)	오치성 내무부장관	자진 사퇴
김대중정부(2001)	임동원 통일부장관	자진 사퇴
노무현정부(2003)	김두관 행자부장관	자진 사퇴
박근혜정부(2016)	김재수 농축산부장관	거부권 행사
윤석열정부(2022)	박진 외교부장관	거부권 행사
윤석열정부(2022)	이상민 행안부장관	거부권 행사

야당유죄, 여당무죄 검찰의 이중잣대

• 야당 겨냥한 표적수사 올인

- 야당대표와 가족, 야당인사, 前 정부인사 등 **민주당 수사에 매진**

※ 이재명 당대표 수사 관련 압수수색 최소 332회

- 87년 이후 유례없는 **제1야당 중앙당사 잇따른 압수수색**

• 대통령 일가와 여권 수사는 방기

- **윤석열대통령 일가** 관련 90여 건의 고발사건 중 이미 **31건 불송치·불기소 처분**

- 박상도 50억 퇴직금 무죄, 김은혜 홍보수석 재산허위신고 불송치,
김현아 돈봉투 사건 1년 넘은 늑장수사, 고발사주 김웅의원 불기소 등

• 국민 대다수, **검찰수사 불공정** 인식

- 검찰수사 불공정 63.7% (조원씨앤아이, 2022.9.4)

검찰의 이중잣대 행태

➡ 코바나컨텐츠 대기업협찬 의혹 사건

- 협찬기업들이 상응한 정당한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억지논리로 무혐의

➡ 성남 FC 후원금 사건

-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한 인허가 등을 부당한 반대급부(특혜)로 보고 기소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윤석열 후보 허위사실공표 사건

- 주가조작 주범 이모씨와 절연했다는 발언 허위로 밝혀졌지만 8개월 간 수사하다
결론내지 않고 수사 중지

➡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잘 몰랐다”고 한 발언
8개월 수사 후 기소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장관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

➡ 윤 집권 후 해양경찰청이 이미 조사해 결론 낸 것을 반복.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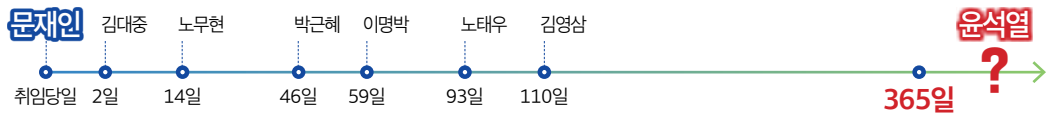
➡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등 직권남용으로 기소

➡ 2019년 고발되었으나 수사하지 않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돌변, 전 정권 압박, 보복수사

협치포기,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 취임 1년 만에 민주주의지수 **8단계 대폭 하락** (16→24위, 이코노미스트)
 - 협치 대신 대결과 정적제거에 몰두한 것이 핵심 하락요인
- 취임 1년간 **야당 안 만난 사상 초유의 대통령**
 -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식 당일, 김대중대통령은 2일, 노무현대통령 14일 만에 야당 지도부 면담
 - 윤석열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만 수차례 회동
- 입에 발린 협치, 그것마저 포기
 - 취임 초기, 말로라도 협치 생색
 - ※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2022.3.10. 당선인사)
 - ※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하겠다”(2022.05.16. 국회시정연설)
 - 최근, 협치대상인 야당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폄훼
 - ※ “4·19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4.19 기념사)

역대 대통령 첫 야당 회동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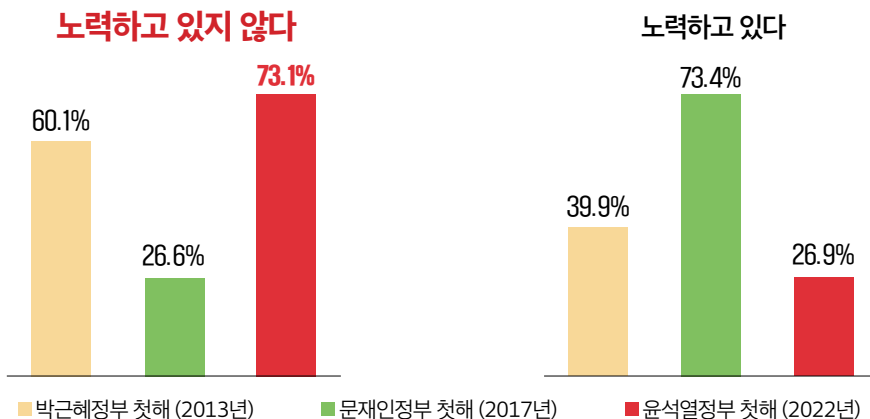
윤석열대통령과 여당의 만남

날짜	대상	형식
6.10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오찬(대통령실)
8.25	국민의힘 전체의원	의원연찬회(천안연수원)
9.14	국힘 반도체특위 소속 의원	오찬간담회(대통령실)
10.19	국힘 원내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국방컨벤션)
11.22	윤핵관 의원 부부	초청 만찬(관저)
11.25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	만찬(관저)
2023. 3.8	국힘 전당대회	축사(고양 킨텍스)
3.13	김기현 대표 등 신임지도부	만찬(대통령실)
3.21	당 지도부, 국정자문위원 등	오찬(청와대 영빈관)

‘국민통합’ 아닌 ‘국민 갈라치기’ 정부

- 노골적인 편가르기, **국민분열** 조장
 - 정치보복·협치거부·소통포기·정치실종으로 정치적 갈등 심화
 - ※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은 불참, 대구 프로야구 개막전은 시구로 참여
- 사회 양극화 심화, 윤석열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 서민은 난방비·공공요금 폭탄으로 비명, 대기업·다주택자 부자감세에 환호
 - ※ 부자감세로 임기중 최대 250조 세수 감소 우려
 - 계층·성·세대간 갈등 조장, 국민 갈라치기 혈안
 - ※ 여가부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 요구에 법·원칙 강조, 노조탄압 등
- 사라진 **국민통합** 메시지
 - 8·15 경축사, 3·1절 기념사, 4·19 기념사에서 ‘통합’ 메시지 실종
 - 야당, 언론, 시민단체 비난하는 적대적 메시지 강화
- 국민통합에 가장 게으른 정부
 - “윤석열정부, 사회갈등 해소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73.1% (한국리서치, 2023.1.25)

박근혜 vs 문재인 vs 윤석열정부 첫해 사회갈등 해소 노력 인식조사



외교
안보

무너진 국익, 불안한 한반도

외교안보 **리스크 1호** 윤석열대통령 철학 없는 **아마추어** 지도자의 국격 훼손

- 미국에 대놓고 욕설한 **초유의 대통령** (2022.9월 방미)
국가망신에 뻔뻔한 거짓말 일관, 가짜뉴스라는 적반하장 대통령실
-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을 향해 ‘바보들’이라 모욕” (WP, 2022.9.22)
- 이란-UAE를 뜯금없이 싸움불인 **무지한 대통령** (2023.1월 UAE 순방)
서툴고 위험한 외교망언, 국제관계 이해 전혀 없는 아무말 안보
- “UAE의 적은 이란, UAE는 우리 형제국가,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
※ “한국 대통령 발언은 ... 그가 ‘전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란 외무부, 2023.1.16)
- 중국·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내몬 **갈라치기 대통령** (로이터, 2023.4.19)
- “(대만해협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
-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워”
- 한글을 부끄러워한 **사대주의·자기비하 대통령** (2022.6월 여당 오찬)
- “내셔널메모리얼파크라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은 멋이 없다”

윤석열대통령 외교안보 리스크에 대한 국민 평가

대통령 욕설파문 사과

필요하다
70.8%

자료 : 조원씨앤아이, 2022.9월

대통령 욕설 진위 여부

‘바이든’
61.2%

자료 : 넥스트위크리서치, 2022.9월

대통령 대만해협 변경 반대

우려된다
67.6%

자료 : 데이터리서치, 2023.4월

대통령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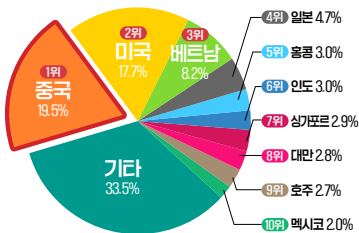
우려된다
66%

자료 : 데이터리서치, 2023.4월

진영편중 외교안보노선, 강대국 패권경쟁에서 한국만 푸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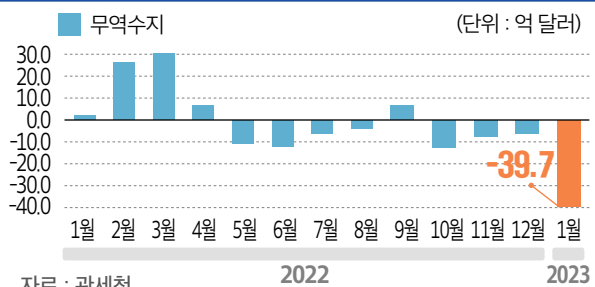
- 윤석열정부 **신냉전** 편향외교, 진영외교
vs 문재인정부 **국익중심** 실용외교, 균형외교
 - 미↔중·러간 지정학적 충돌에 매몰,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
 - 미국정부의 중국포위에 휩쓸린 윤석열정부, 전형적 ‘약소국 콤플렉스’
 - 우크라이나 무기제공 시사, ‘전쟁개입’ 해석으로 한↔러 갈등 고조
- 反중·러 기조 **경제안보 실패**로 우리 국익만 훼손
 -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 (2023년 19.5%, 2위 미국 17.7%)
2023.1월 대중 무역적자 -40억 달러, 최대적자국 전환된 중국
※ 문재인정부 시기 수출액 비중 27~25% → 윤석열정부 들어 23~19%
 - 러시아 진출 151개 한국기업 경제적 타격 불가피, 수출입 악영향
- **국익전무 한미정상회담**(2023.4월), 미국이 무시한 윤석열 친미외교
 - 진전없는 핵억지, 정부·여당은 “핵공유” 자화자찬하나 미국은 부인
 - 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 차별규제 해소 실패
 - 미국 도청에 말 한마디 못한 굴욕, 대등한 주권국·동맹국 위상 포기

한국의 교역국 비중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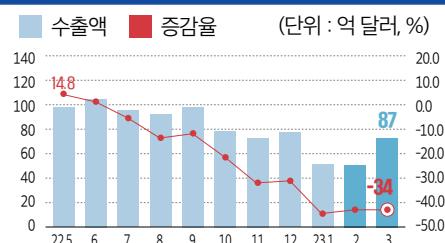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윤석열정부 대중국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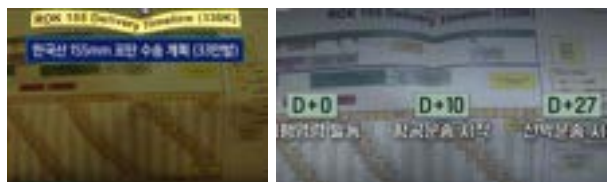
자료 : 관세청

반도체 월별 수출액 추이



자료 : 관세청

윤석열정부의 포탄 33만발 우크라 지원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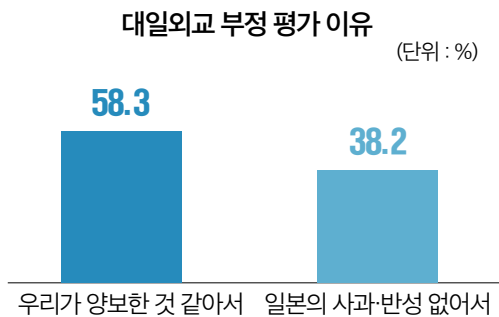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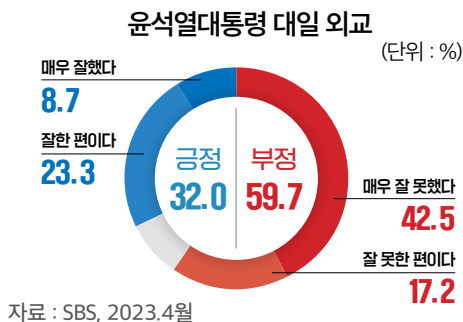


자료 : 뉴욕타임스, 2023.4.8

대일 굴욕외교, 매국외교, 빈손외교 최악의 외교참사, 대한민국 포기 외교

- 우리 돈으로 일본 짓값 대신 갚겠다는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 ① **주권포기**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 계승한 헌법 부정
 - ② **국민포기** 피해자인 국민 외면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
 - ③ **법치포기** 대법원 확정판결 무시하고 식민지배 인정 셀프보상
- 국민이 반대하는 강제동원 해법으로 성사된 한일정상회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일본에 모든 것을 내어준 굴욕적 빈손투항
 - ①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흥정거리로 삼은 **역사모독 정부**
※尹대통령 외신 망언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으라는 건 못 받아들여” (WP, 2023.4.24)
 - ②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지소미아 정상화 등 외교적 지렛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헌납한 **외교무능 정부**
 - ③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침묵, 생명·안전 포기한 **국민모독 정부**

윤석열정부 대일외교에 대한 국민 평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한일 관계와 국익 위해 찬성	35	59	정부 방안,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어 반대
만약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세대 대상 기부한다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	27	64	미래세대 대상 기부, 배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일 관계, 우리가 일본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	31	64	한일 관계, 일본의 태도 변화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
현재 일본 정부,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8	85	현재 일본 정부, 과거사 반성하지 않는다

자료 : 한국갤럽, 2023.3월

친일 군사행보, 한미일 군사동맹 의지 표출

- 육일기 건 일본 해상자위대와 독도 인근 훈련 (2022.9~10월)
- 독도영유권 주장하는 일본과의 영토분쟁 문제 무시
 - 일본 헌법에도 없는 일본의 정식군대를 인정한 꼴
-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입** 가능성 가시화
 - 자위대가 2015.9월 정비된 「중요영향사태법」 범위 확대 적용, 집단자위권 행사하면 유사시 한국 또는 북한 영역 진입 가능
 - ※ 자국에 대한 직접공격이 없어도 ‘존립위기사태’ 적용시 무력행사 가능
 - 2022.12월 일본 국가안보전략에 **적기지공격능력** 최초 명시, 일본의 방어중심 안보정책이 ‘공격가능’으로 바뀐 역사적 전환
- 한미일 군사동맹화 추진, 일본 군사대국화 용인하는 냉전적 행보
 - 한국을 미중갈등, 신냉전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윤석열정부
- 한미일 ‘파이브아이즈’ 추진, 중국 경제보복(제2의 사드) 우려
 - ※ Five Eyes :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군사기밀 정보동맹

일본 국가안보정책 대전환 핵심내용

주변국가 인식



북한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



중국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



한국

매우 중요한
이웃



미국

역사적 결정 환경,
전폭 지지

안보정책 변화

전후 처음으로 ‘적기지공격능력’(반격 능력) 보유 명시

방위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2027년까지 2%로 증액

일·미 동맹의 억제력·대처력 한층 강화

유사사태(전쟁)를 염두에 두고 대응 능력 강화

도입예정 공격무기

사거리 1250km 이상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해 조기 배치

일본 자위대 ‘12식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200km에서 1000km 이상 개량해 2026년 지상 배치(2028년 함정, 2030년 전투기)

도서방위용 고속 활공탄 2026년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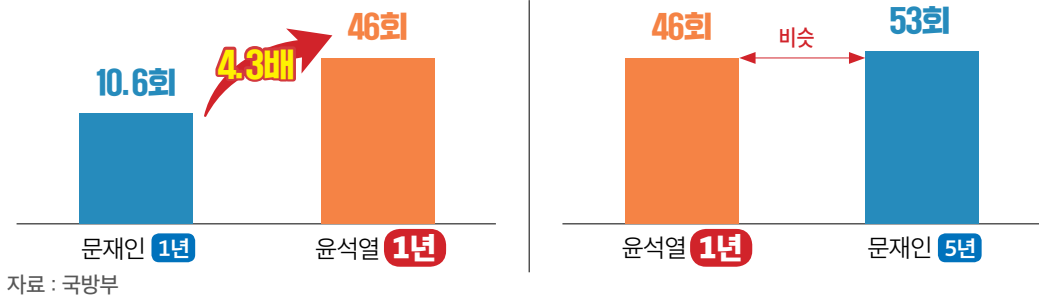
마하 5 이상 속도의 극초음속 유도탄 2030년 배치

자료 : 일본 국가안보전략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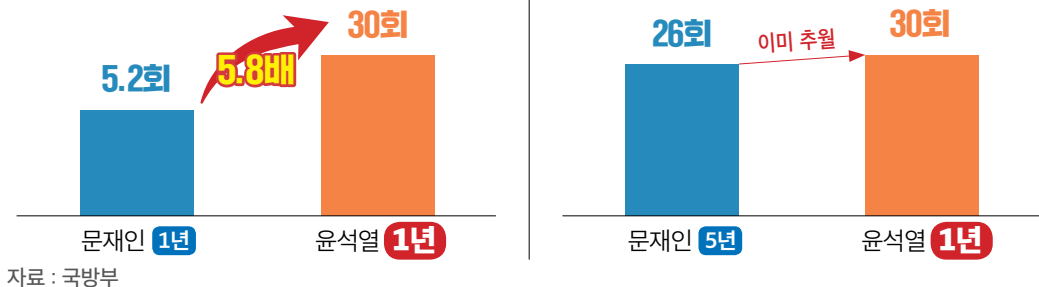
사라진 평화, **출구** 없는 한반도 안보불안

- 윤석열정부 1년 북한 **무력도발 46회**
 : 문재인정부 1년 횡수(10.6회)의 4.3배
 - 윤석열정부 1년 무력도발 횡수, 문재인정부 5년 횡수(53회)에 버금가는 수준
 - 2018년 한반도 평화국면부터 보면 문재인정부 4년 반 횡수(42회) 이미 추월
- 윤석열정부 1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30회**
 : 문재인정부 1년 횡수(5.2회)의 5.8배
 - 문재인정부 5년간 탄도미사일 발사 총 26회, 윤석열정부가 이미 추월
- 북한, 핵무력 법제화로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것 선언
 - 2022.9.8일 '핵무력법' 채택, 핵무기 전쟁초기 사용가능 내포

윤석열정부 vs 문재인정부 북한 무력도발 횡수 비교



윤석열정부 vs 문재인정부 탄도미사일 발사 횡수 비교



국민불안 키운 안보참사 시리즈, 안보 무능력·무책임 정부

① 북한 무인기 안보참사, 뺨 뚫린 서울 하늘에 텅빈 대책

- **탐지실패**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 후 무사 복귀
- **공유실패** 침투대비태세 ‘두루미’ 사건발생 100분 뒤 발령
- **대응실패** NSC 패싱 무사안일, 지상 방공무기 무용지물
- **대책실패** 현실성 없는 드론사령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조

② 미국 도청 안보참사, 하늘에 이어 사무실까지 뚫린 대통령실

- 몽땅 다 들려준 수준 (우크라이나 무기제공 계획, 포탄수송 일정)
-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대북, 대일외교, 반도체·자동차 전략 등)
- 미국은 도청 인정, 대통령실은 “악의 정황 없다”는 황당한 해명
- **명백한 주권침해** 항의·진상규명 아닌 “협의”하는 비굴한 안보

③ 핵무장 주장 안보참사, **한반도 핵전쟁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

- 한국 스스로 비핵화 명분 상실, 북한 핵보유국 공식 인정 위험
- 한미동맹 근간 훼손, 미국의 핵억지공약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
- 국제사회 불용, 일본·대만 핵무장 등 동북아 ‘핵도미노’ 위험
- 전술핵 배치해도 핵심권한 부재 (핵전략 공동설계, 핵발사권 공유)

북한 무인기 침투 경로 및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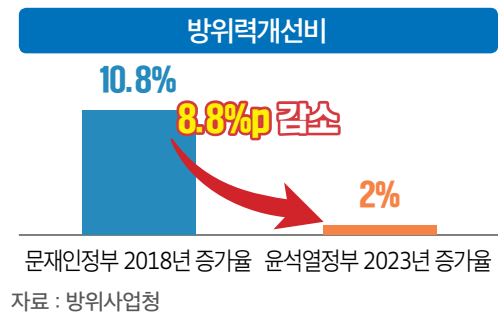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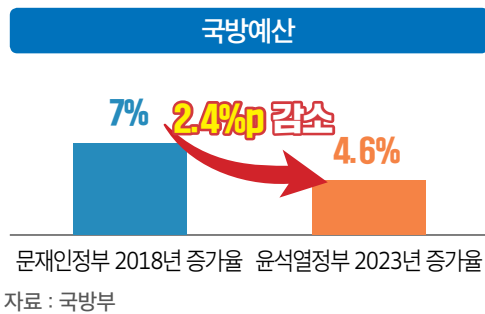
- ▷ 10:19 1군단 포착 → 10:25 北 무인기 판단 → 11:10 지상작전사령부 보고
→ (공유×) 10:50 수도방위사령부 北 무인기 포착 → 11:20 北 무인기 판단 → 11:27 합참 보고
→ 판단 지연 → 12:00경, 즉 **100분 뒤 ‘두루미’ 발령**
- ▷ 북한 무인기 포착 후 12:10 국방부장관 보고(**111분 뒤**), 12:12 대통령 보고(**113분 뒤**)
- ▷ 대통령실 상공 침투 사실은 군이 사건발생 후 **8일**, 대통령은 **9일 뒤**에야 파악

자료 : 국회 국방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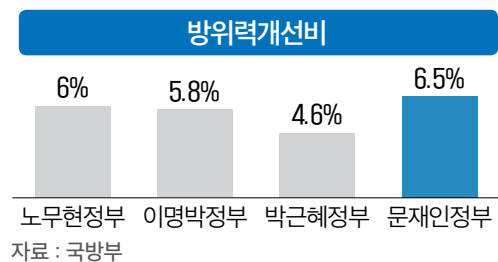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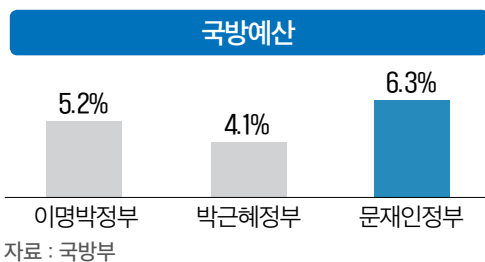
말로만 북핵대응, 실제 국방력에는 무관심

- 윤석열정부 첫 국방예산 4.6%, 방위력개선비 2% 증가
vs 문재인정부 첫 국방예산 7%, 방위력개선비 10.8% 증가
※ 문재인정부 2018년 증가율(7%), 2009년(8.7%) 이후 9년 만에 최대치
- 문재인정부, 역대 최고 국방예산(6.3%) 및 방위력개선비(6.5%) 증가
- 2023년 국방력 강화 신규사업 70.6%(34개 중 24개) 미반영
- 윤석열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북핵대응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은 8개 중 7개 미반영

윤석열정부 vs 문재인정부 첫째 국방예산 및 방위력개선비 비교



문재인정부 국방예산 및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윤석열정부 2023년 북핵대응 신규사업 미반영 내역

사업명	방위사업청 요구안	윤석열정부안
F-X 2차 사업	200억	-
UH/HH-60 성능개량 사업	309.03억	-
F-15K 성능개량 사업	11.67억	-
철매-2 성능개량 2차 사업	714.19억	-
전술지대지유도무기-2 (R&D) 사업	200.29억	-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사업	8.5억	-
230mm급 다련장 사업 (3차 양산사업 누락)	2,155.45억	416.63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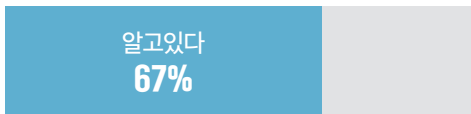
자료 : 방위사업청

MB 답습 無대책, 담대하지 않은 '담대한 구상' 無원칙 위험한 발상, 無해법 공허한 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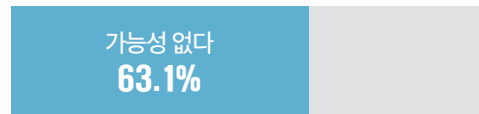
- 윤석열정부 '담대한 구상', MB정부 '비핵·개방·3000' 복사판
 -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둘 다 설계, 실패한 대북정책 재탕
- 先비핵화 고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대북 불신의 구상
 - 대북 '제안'이 아닌 윤석열정부의 '결심' 또는 '다짐' 수준, 대북정책 단절선언이자 국내정치용 말잔치에 불과
 - 전제 위한 노력 없는 '담대한 구상'은 무용지물, 반드시 실패
- 남북간 합의 파기 언급, 역대정부가 추구한 북핵해법 이탈
 - 남북 합의는 특정 정당의 것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맺은 결실, 파기 언급 자체가 어불성설 (윤석열대통령, 이종섭 국방장관 등)
- 윤석열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는 전쟁을 상수로 한 **가짜 평화**
 -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전쟁 없는 평화' vs 윤석열정부가 원하는 것은 '평화 없는 전쟁'
 - 군사압박에만 매몰, 한반도 강대강 가속화로 전쟁 가능성만 높아진 현실

윤석열정부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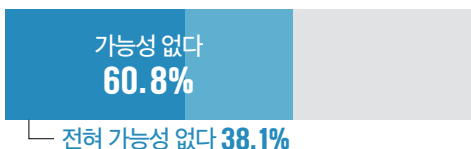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구상'



윤석열정부의 목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 복귀를 유도하겠다"



'담대한 구상'에서 제시한
"비핵화 단계별 우리의 조치 동시 이행"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대응



자료 : 조원씨앤아이, 2022.10월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제 2 부

국정 리스크 1호 윤석열대통령 10대 망언

- 취임 1년 윤석열대통령의 말은 국가의 품격 훼손
야당 공격, 진영 갈등, 혐오와 적대, 독선과 오만의 극치
-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들에 단 한 차례 사과도 없었던 대통령
- 오히려 국민들이 잘못 이해했거나 언론이 왜곡했다며 책임 회피
- 지난 1년간 대통령의 망언에 부끄러움은 오직 국민의 몫

1. 대통령의 욕설
2. 유치한 피장파장
3. 나르시시즘의 극치
4. 배려, 존중, 공감 상실
5. 일본 극우 수준의 역사관
6. 서툴고 위험한 외교 망언
7. 서슴지 않는 적대와 혐오
8. 모국어를 부끄러워하는 대통령
9. 다시 색깔론
10. 국민이 이해해줘야 하는 대통령

1

대통령의 욕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년 9월 21일, 미국 뉴욕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 해외 주요언론들이 연일 윤석열대통령 욕설 헤드라인으로 보도해 국가망신
 -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을 향해 ‘바보들(Idiots)’이라고 모욕했다
(South Korean president overheard insulting U.S. Congress as ‘idiots’)” (2022.9.22. 워싱턴포스트)
- 국가망신에 사과는 커녕, “이 새끼들”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뻔뻔한 거짓말
 - 대통령 욕설 사과 필요 70.8%, 불필요 27.9% (2022.9.28. 조원씨앤아이)
 - 대통령 발언 ‘바이든’ 61.2%, ‘날리면’ 26.9% (2022.9.28. 넥스트위크리서치)
- 욕설보도를 국익 훼손하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며 적반하장
 -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 비공감 63.6%, 공감 33.3% (2022.9.28. 넥스트위크리서치)
 - MBC 전용기탑승 배제 부적절한 조치 65%, 적절한 조치 28% (2022.11.17. NBS)
- 욕설파문으로 대통령 국정지지율 24%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 폭락
(2022.9.30. 한국갤럽)

2

유치한 피장파장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

(2022년 6월 8일, 도어스테핑 중 검사편중 인사 질의 답변)

- 국민을 상대로 전혀 사실이 아닌 편견에 사로잡힌 선동
 -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대통령실 7명, 장차관급 13명이 전현직 검찰출신
 - 문재인대통령 취임 1년 차에 민변 출신은 대통령실 0명, 장차관급은 법제처장 1명 뿐
- 검찰편중인사 지적에 ‘검치(檢治)가 법치’라는 검찰공화국 주장다운 망언
 - “선진국 중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한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냐” (2022.6.8. 도어스테핑)
- 문제 지적하면 전 정부도 그랬으니 우리도 상관없다며 피장파장 대응
 - 문재인정부가 낫다 57.8%, 윤석열정부가 낫다 32.8% (2022.7.20. 미디어토마토)
 - ‘문재인정부가 더 잘했다’ 53%, ‘윤석열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 38% (2023.1.31. 리서치뷰)

3

나르시시즘의 극치

전 정권 지명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

(2022년 7월 5일, 도어스테핑 중 부실인사검증 질의 답변)

- 자신은 틀리지 않다는 자아도취, 오만과 독선에 휩싸여 현실감각 상실
 - 박순애 교육부장관후보자 ‘부적합’ 63.9%, ‘적합’ 14.9% (2022.6.11. KSOI)
 -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 (2022.7.4.)
- 명백한 문제, 잇따른 후보자 낙마에도 자신의 믿음대로만 주장
 - 음주운전, 논문표절, 조교갑질 등 무시한 채 훌륭하다고 치켜 세우며 임명 강행
 -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았다”며 고난을 이겨낸 영웅으로 격려
- 자기 발언의 비밀관성과 모순에도 순간순간 자기방어에만 급급
 - “음주운전 전과야말로 악질 중 악질이죠” (대선후보 당시)
→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상황과 가별성, 도덕성 등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
 -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대선에서 이용수 할머니 방문 시 발언)
→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다.” (2023.3.22. 국무회의)
- 안된 것은 남 탓, 밀어붙이기에는 근거 없는 확신과 자화자찬
 - 안보위기, 경제 위기 등은 전 정부 탓. 지지율 하락은 언론 탓, 여론조사 탓
 -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 (2023.3.21.)

4

배려, 존중, 공감 상실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던 말야?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

(2022년 10월 31일, 10.29 이태원참사 현장)

- 정부를 원망하는 유가족 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뱉은 망언
 - “왜 미리 대피가 안됐나?” (2022.8. 홍수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반지하 방에 방문 시 발언)
 -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들니까?” 박근혜 데자뷔
- 대응부실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닌 현장조사 나간 검사의 태도
 - 이태원참사 정부대응 부적절 70%, 부적절 20% (2022.11.11. 한국갤럽)
- 국민에게 습관적으로 하대하는 권위주의적 안하무인
 - “이거는 뭐야? 당도가 좀 떨어지는 건가? 이게 빨개지는 건가? 떡볶이도 좀 사라 그래” (2022.8. 마트 방문중)
 - “그냥 먹어도 되나? 농약 있나?” (2022.10.5.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 방문중)
 -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2022.11.7.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중)
 - “수출 단가가 대당 얼마야? 이게 미사일의 일종인가?” (2022.11.24. 방위산업기업 방문중)
 - “막내 선수는 대표된 지 얼마 됐어?” (2023.2.14. 국가대표선수촌 방문중)

5

일본 극우 수준의 역사관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년 4월 26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 100년이 지나도록 반인륜적 식민지배에 제대로 사과나 반성하지 않은 일본이 아니라 100년 전 역사에 얽매어 사과와 반성 요구하는 한국이 문제라는 일본 아베 같은 망언. “전쟁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우리의 자녀나 손자 그리고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2015.8. 아베 신조 일본총리)

- 3.1운동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나라 빼앗긴 것이 우리 책임이라는 망언의 후속편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
- 이러한 역사 인식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일갈 “윤석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 유럽국들의 화해협력도 전범국 독일의 처절하고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으로 시작

- 유대인들에게 무릎 사과 (1970. 폴란드 유대인 위령탑, 빌리 브란트)

-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합니다. 독일인의 역사적 책임에는 끝이 없다”

(2023.4.19. 게토 80주년 추모행사,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워싱턴포스트도 비판한 일본의 역사적 태도

“일본도 한국에 최소 네 차례 사과로 보이는 공식 언급을 했지만 독일과 일본에 대한 이웃 나라들의 태도가 다른 것은 사과하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많은 유럽 사람들은 1970년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수상이 폴란드 유대인 희생비 앞에서 헌화하며 예고 없이 무릎을 꿇은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일본은 그와 비슷하게 극도로 감동적인 뉘우침의 순간을 보여준 적인 한 번도 없다. 대신 공식 사과는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늦은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종종 역사를 세탁하려는 관료들로부터 이를 부정하는 언급이 나왔다.” (2015년)

6

서툰고 위험한 외교 망언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2023년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 순방)

-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발언이 낱을 파장과 결과 고려 없는 아무말 대잔치 지속
- 이란은 대통령 발언에 간섭 발언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하며 반발
 - “이란과 UAE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걸프 국가들과 역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과 빠르게 진행되는 긍정적인 발전에 대해서 그가 ‘전적으로 무지하다(totally unaware)’는 것을 보여준다.” (2023.1.16. 이란 외무부)
 - 이란 나자피 외무부 차관은 윤강현 주이란 한국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 (2023.1.18.)
 - 지난 4월 5일 이란은 8년 만에 아랍에미리트 주재 대사를 다시 임명하는 등 양국 관계 복원
- 최근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대만해협 변경 반대 발언도 중요한 교역국인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국화
 - “이런 발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국 쪽은 엄중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 (2023.4.23.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건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 (2023.4.19.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
- 대통령의 서툰 외교적 발언이 경제적 손실, 안보위기 초래, 국민은 불안
 - 윤석열대통령 대만해협 변경 반대 발언에 우려된다 67.6%, 우려 안된다 30% (2023.4.24. 데이터리서치)
 - 윤석열대통령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에 우려된다 66.0%, 우려안된다 32.0% (2023.4.24. 데이터리서치)

7

서슴지 않는 적대와 혐오

화물연대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로

(2022년 12월, 비공개 참모회의)

- **지지층 결집 위한 막말선동으로 국민 갈라치기**
 - 노조를 적대시, 노조파업을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동일시해 이념적 공세
 - 노조와 파업을 ‘건폭’, ‘조폭’, ‘사회적 재난’ 등으로 조리돌림
- **노조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비판언론, 야당, 시민단체 등 향해 적대와 혐오 발언 서슴지 않음**
 -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없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 (대선후보시절)
 -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2022.11.18. 도어스태핑)
 -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절대 안 된다.” (2023.4.19. 제63회 4.19 기념식 기념사)

8

모국어를 부끄러워하는 대통령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다.**

(2022년 6월 10일, 여당 오찬)

•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모국어 비하

- BTS가 한국어로 노래 해 빌보트를 석권하고, 한국어 영화가 국제영화제를 주름잡는 시대
- 세계인이 한국어로 떴창을 하는 마당에 영어는 세련됐고, 한국어는 촌스럽다는 후진 자기비하

• 공식 발언에서도 구태어 영어단어 남발해 국민소통 저해

-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공격적으로)하게 뛰어보자.”
-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정부 관여)가 바로 레귤레이션(regulation·규제)이다.” (2022.12.21.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 “이를 위해 조금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싱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2023.1.25. 국무회의)
- “올해부터는 체인지 싱킹,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023.1.30.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특히 국책은행이 어그레시브하게 금융투자를 선도해 달라” (2023.2.28.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

• 국가 자긍심 고려 없이 미국의회 연설도 영어 사용

- 영어를 사랑했던 이명박대통령도 미국 국민방문 미 의회 연설은 국가적 자긍심을 이유로 한국어 사용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미의회) 연설은 한국어로 하기로 했다. 외국 정상의 자국어 사용은 그 나라 자부심이 걸려 있는 문제라 여겼기 때문이다. 대개 외국 정상들의 미 의회 연설은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같은 강대국들의 경우 자국어로, 개도국의 경우 영어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9

다시 색깔론

(협치를 요구하는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종북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의 협치는 불가능하다**

(2022년 10월 20일, 원내당협위원장 오찬)

- **협치하자니, 밀도 끝도 없는 종북주사파 타령**
 - 협치할 의사나 의지도 없이 야당을 종북세력 취급
- **이미 대선 때부터 시작된 종북몰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지속**
 - “좌익 혁명이념과 주사파 이론 등을 배워 끼리끼리 살아온 집단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대선후보 시절)
- **극우발언 등으로 물의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임명**
 -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부터 완전히 빨갱이다. 청와대에 붉은 용이 앉아서 온 나라를 다 망치고 있다” (2019.8.)
 - “문재인대통령은 확실한 김일성주의자.” (2022.10.12.)

10

국민이 이해해줘야 하는 대통령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2022년 6월 15일, 출근길)

- 대통령의 책임과 본분 망각한 역대급 망언
 - 초보대통령이니 국민에게 이해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
- 대통령 단임제에서 대통령은 누구나 처음
 - 대통령은 예행연습이 없는 자리, 경험이 아니라 증명 필수
- 무능과 아마추어리즘 스스로 실토
 - 국정책임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한 없이 가볍고 경솔한 태도
 - “지금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 주시죠” (2022.6.15.)

민주연구원

민주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민주연구원은 대한민국과 더불어민주당의 비전과 전략 수립,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정책개발에 매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과 국가전략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 가겠습니다.

윤석열정부 1년 평가 핸드북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발행처	민주연구원
발행인	정태호
인쇄·제본	경성문화사
발행일	2023.5.9.

윤석열정부 1년 평가 핸드북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